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사회단체들의 대응: 개혁과 통일의 갈등

정 병 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상임연구원)

◆ 논문 요약 ◆

구동독에서 통일 이전에 일어났던 사회주의 개혁운동은 분단이라는 요인 외에도 사회주의의 평등 이데올로기와 1960년대까지의 경제 성장의 토대 위에서 노동현장을 매개로 이루어진 노동사회적 통합과 통제로 인해 늦게 형성되었다. 더욱이 뒤늦게 형성된 개혁운동세력조차 대중들에 뿌리박지 못함으로써 통일 전야에서 분열되어 갔다. 동독 노조들도 통일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서독 노조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가운데 서독 기민연의 급속한 통일 정책과 세련된 민족주의적 선동으로 인해 동독의 정치·사회단체들과 대중들은 흡수통일로 휩쓸려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정치적 통일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동독주민들이 사회경제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독자적인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I. 서론

독일 통일이 급행열차를 타기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독일 청년들중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었으나, 1년 후 통일은 기정사실이 되고 독일의 젊은이들은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열기에 흠뻑 젖었다. 그러나 막상 통일이 되고 난 후에는 서독의 각종 제도와 사회단체들이 통일 과정에 대해 이렇다할 준비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굳어졌다. 실제 서독의 여러 정치·사회단체들은 통일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당의 경우에는 통일 과정 초기와는 달리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인 1990년 인민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당을 제외하면 독일의 가장 중요한 사회단체의 하나로서 통일 이후 조직 확장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보았고 내부 진통도 가장 많이 겪은 노동조합조차도 통일을 별 준비 없이 맞은 것이 사실이다.¹⁾

이러한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관심을 가지고 통일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단체들은 동독의 여러 정치·사회단체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통일운동을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동독내 체제개혁을 위해 조직되고 활동했던 단체들이었다. 이들이 통일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통일의 물결에 휩쓸려 간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경우도 서독의 경우 별 준비 없이 통일을 맞았다고 하지만, 노조의 통합 문제에는 적극적이었으며 통일 후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해서도 일정하게나마 노력해 왔다 특히 동독의 경우에는 기존의 노조조직을 벗어나 개혁과 통일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정치·사회단체들의 대응과 결과를 통일의 진행과정과 결합해 역동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개별적으로 고찰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다 통일의 과정 속에서 각 정당들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또 그에 따라 동독의 각종 정치·사회단체들은 어떻게 대응 혹은 변해갔는지를 살피는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기 즉 동독의 변화가 시작된 1989년부터 1990년 최초의 인민의회 자유선거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우는 통일의 정치적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과 같은 방식으로 고찰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후 통합노조의 정책을 포함해 동독노조와 서독노조의 개별적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론의 분석에 앞서 동독의 사회질서와 노동조합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장을 할애한다 이것은 왜 동독의 정치·사회단체들이 1980년대 말에 와서 개혁운동과 통일분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와 달리 기존의 노동조합은 왜 마지막까지 소극성을 벗어나지 못했

1) 베르너 푸쉬라, “노동조합과 독일통일,” 『노동문제논집』, 제9권, (1991), p. 221 참조.

는지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II. 동독의 사회질서와 노동자 이해 대변구조

1. 동독의 사회질서: 분단 효과와 ‘노동사회’적 통합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한 무계급 사회의 기치를 내건 독일인민공화국(동독, DDR)의 사회주의 질서가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입각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BRD)의 자본주의 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를 통한 높은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 에 비해 사회계층간의 평등을 더 광범위하게 보장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소유권을 “특정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²⁾라고 할 때, 동독 사회주의는 수입과 생활조건을 결정하는 소유권 면에서 자본주의와는 또 다른 불평등을 결과한 체제였다³⁾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계급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까지 소유한 사회가 자본주의 계급사회라면 정치·경제·기술적 처분권중 하나 이상을 소유하거나 적어도 참가할 권한을 가진 계층이 생산된 부에 대한 특권적 부분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사회가 현실사회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⁴⁾ 곧, 현실사회주의에서는 모든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은 국가기구를 장악한 당에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인민민주주의의 요소가 퇴색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는 새로운 불평등에 대한 인민들의 저항이 오랫동안 형성되지 못했다. 이것은 폴란드에서 줄리다르노스치

2) Aage Sørensen, “Clouding Essay: Class, Status and Power,” David B. Grusky(ed.),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 (Boulder et al.: Westview Press, 1994), p. 5.

3) Karl Ulrich Mayer & Martin Diewald, “Kollektiv und Eigensinn: Die Geschichte der DDR und die Lebensverläufe ihrer Bürg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1996), pp. 8~17 참조.

4) Heike Solga, “Klassenlagen und soziale Ungleichheit in der DD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1996), p. 20.

(Solidarnosc)와 가톨릭이 저항집단을 조직했고, 헝가리에서는 기술관료들이 저항세력을 형성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우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동독에서도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소련과 관료주의에 대한 반대와 비판운동이 활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이 소련의 개입으로 무산된 후 많은 이견 엘리트들이 서독으로 넘어감으로써 저항엘리트가 형성될 기회가 상실되었던 것이다.⁵⁾

그러나 분단 상황을 강조하는 주장이 동독 사회주의의 현실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 주장은 소련 개입이후 일정한 시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1970년대 말 이후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반대와 저항운동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분석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위해 그라이펜하겐 부부(Martin & Sylvia Greiffenhagen)의 “노동사회(Arbeitsgesellschaft)”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들의 “노동사회” 개념은 “모든 실제 생활들이 노동현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매개되고 보장되며 통제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라이펜하겐 부부는 이 개념과 관련해 매개와 보장을 언급하면서도 주로 노동현장을 통한 ‘통제’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노동사회’를 통제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의한 물질적 보상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동의 형성까지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곧 여기에서 ‘노동사회’는 ‘물질적 보상과 이데올로기적 동의에 기초하고 노동현장을 통해 매개되고 통제되는 통합체제로 규정된다.

동독의 현실사회주의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바로 이러한 사회질서가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독 사회주의의 사회질서를

5) 1961년 동독이 장벽을 쌓을 때까지 총 2백만 명이 서독으로 넘어갔다. Martin Greiffenhagen & Sylvia, “Die ehemalige DDR als das ‘deutsche’ Deutschland?,”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ed.), *Die neuen Bundesländer* (Stuttgart et al.: W. Kohlhammer, 1994), p. 15; Ursula Feist, “Zur politischen Akkulturation der vereinten Deutschen. Eine Analyse aus Anlaß der ersten gesamtdeutschen Bundestagswahl,”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1-12 (1991), p. 22 참조.

특징짓는 이 ‘노동사회’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기업내의 당조직에 의해 노동현장을 매개로 직·간접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 외에, (현실)사회주의적 평등에 의한 설득과 경제 발전에 따른 물질적 동기에 기반한 ‘통합된 주체’라는 측면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⁶⁾ 실제 1980년까지도 동독의 1인당 GNP는 세계 제24위인 7,180달러에 이르러 동구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당시 러시아(4,550달러)의 두 배에 가까웠으며, 4.7%라는 1970년대(1970-79) GNP 성장속도도 러시아(4.1%)보다 빠른 것이었다.⁷⁾

따라서 동독의 인민들은 결코 현실사회주의적 관료지배정치의 ‘수동적 대상’이 된 것만은 아니다.⁸⁾ 이러한 측면은 1970년대 말부터 경제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동독 현실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이른바 이견그룹의 반대운동(Dissidentbewegungen)이 생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 분단효과와 사회적 통제에 의해 정치세력화한 저항운동이 형성되지는 못했지만, 노동사회적 통합의 조건들이 붕괴됨에 따라 기존 조건에서 가능한 저항의 형태들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견그룹의 비판의 초점은 경제적 자원의 결핍이 아니라, 인민 민주주의의 후퇴에 있었다.

2. 동독의 노동자 이해대변 구조: 노동조합 일원체제

동독의 노동자 대변구조는 노동조합 일원체제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유일한 대중조직으로서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상급단체인 동독자유노련(FDGB)에서부터 사업장 수준에 이르기까

6) Mayer & Diewald, *op. cit.*, p. 16 참조.

7) Dietmar Gohl,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ine aktuelle Landeskunde* (Frankfurt/M.: Fischer, 1986), p. 110 참조.

8) 그라이펜하겐 부부는 동독 사회가 프로이센의 전통적인 보호-복종 정치문화를 답습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동독의 인민들이 정치의 수동적 대상이었다는 입장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동독사회가 안정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저항들과 1970년대 말 이후 형성되기 시작하여 1989/90년 변동의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해 간 개혁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Greiffenhagen, *op. cit.*, p. 11; 정병기,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이론』, 통권 17호, (1997) 참조.

지 통일사회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의 지도 아래 중앙집중적으로 조직되어, 당과 국가의 전달띠(Transmission-sriemen)로 기능한 것이다. 지역별·산업별로 조직된 단위노조의 재정을 비롯한 모든 결정권은 단일 통합노조인 자유노련에 집중되어 있었다.⁹⁾

이른바 ‘노조의 기초’로 인정되는 사업장 조직으로는 기업마다 조직되는 기업노조기구(BGO: Betriebsgewerkschaftsorganisation)와 학교노조기구(SGB: Schulgewerkschafts-organisation) 및 지역노조기구(OGB: Ortsgewerkschaftsorganisation)가 있었다. 기업노조기구와 학교노조기구는 10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기업체나 학교에 조직되었고, 지역노조기구는 노조원이 10명 이하인 기업이나 학교의 종업원과 교원을 비롯하여 연금생활자, 가사종사자, 농어촌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으로 이루어졌다. 노조기구의 지도부는 각각 기업노조지도부(BGL), 학교노조지도부(SGL), 지역노조지도부(UGL)라 불렸다. 각 사업장 노조의 하부조직으로서 현장 노조원총회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노조신임대의원(Vertrauensleute)들로 구성되는 노조그룹(Gewerkschafts-gruppe)이 기초단위를 이루며, 노조그룹과 기업노조지도부 사이에는 다시 각 생산분과마다 조직되는 분과지도부(AGL: Abteilungsgewerkschaftsleitung)가 존재했다.

일정한 범위에서 기업노조기구의 공동결정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나,¹⁰⁾ ‘문서상의 권한’에 불과해 종종 “상징적 의례(symbolisches

9) Ulrich Gill, *Der 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 (FDGB): Theorie - Geschichte - Organisation - Funktion - Kritik*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9); Theo Pirker, Hans-Hermann Hertle, Jürgen Kädtler and Rainer Weinert, *FDGB - Wende zum Ende: Auf dem Weg zu unabhängigen Gewerkschaften?* (Köln: Bund-Verlag, 1990) 참조.

10) 공동결정권과 관련된 노조의 활동은 주로 기업 계획회의(Plandiskussion)와 기업 단체협약(Betriebs-kollektivvertrag)을 통해 이루어졌다. 계획 회의에서는 공동결정권이 사실상 거의 없고 대개 제안만 허용되었으며, 매년 맺는 단체협약은 수당 문제 등 상위 협약이 지정하지 않은 사안들을 상세하게 다룰 수 있었으며 특히 해고와 산업안전 문제에서 노조의 동의가 필요했다. Gill, *op. cit.*, p. 376 이하 참조.

Ritual)”로 치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일상적 이해대변은 전 사회 차원의 이해대변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다.¹¹⁾ 곧 전 사회 차원의 이해대변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경영자와 종업원이 공동의 계급기반에 입각해 있다는 현실 사회주의 사회의 이념에 근거를 두고 종업원과 경영진의 마찰을 무마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작업과정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경영진과 기업노조지도부 간 갈등이 있을 때는 기업에 파견된 ‘기업당조직(Betriebsparteiorgane)’이 계급적 관점과 전체 사회의 이익에 입각하여 조정했고, 경영진과 기업노조지도부는 그 결정에 따라야 했으며, 기업당조직은 현장 감독기관으로서 실제 많은 사업장 영역에 개입했다. 따라서 구동독의 사업장 노조는 노조조직상 상급 노조의 위계체계에 종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수준에서도 경영진 외에 당기관에 종속된 상태였다.

III. 독일 통일과 정당·사회단체의 변화: 개혁의 좌절과 통일의 진행

1. 사회주의개혁운동의 정치세력화: “우리가 인민이다”

동독내 인민민주주의의 후퇴를 비판하는 반대운동은 1970년대 말 이후 생겨난 이견그룹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반대운동의 형성은 자유공간으로 남아있던 교회를 중심으로 인텔리계층에 기반한 소규모 평화 및 인간·시민권 운동의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시민민주적 자유의 획득을 목표로 한 이 운동의 주도자들은 일반 인민과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회의 주변인물들(Randfiguren)들이었다.¹²⁾

11) *Ibid.*, pp. 379-81.

12) Jens Reich, “Warum ist die DDR untergegangen? Legenden und sich selbst erfüllende Prophezeiung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1996), p. 6. 이러한 의미에서 독어 및 영어권의 많은 저술들은 1970년말부터 변동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견그룹과 저항운동체들을 시민운동단체라고 칭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의 “시민”이 갖는 개념은 보다 상세한 논의를 요하므로 이 글에서는 1989/90년 변동기 이전

동독내 반대운동의 공개적 정치세력화는 1980년대 말 소련과 다른 동구국가들의 개혁 물결 이후였다. 특히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정책이 동독내 반대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사회주의 개혁의 세력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1989년 여름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서독으로 향하는 대홍수로 시작된 여행자유화와 민주적 권리의 요구는 체제개혁의 소리로 승화되면서 대중시위로 발전한 9월을 거쳐 10월에는 정점을 이루었다.

당시 동독 인민들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주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프롤레타리아와 인민의 이름으로 자본가로부터 빼앗은 인민의 권력을 자본주의 잔재의 청산과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시한부 독재를 행사한 후 다시 인민에게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사회당(SED) 정권이 한시적 독재(Diktatur)가 아니라, “당서열명부(Nomenklatur)”에 입각한 전제(專制 Allein herrschaft)로 흘러간 사실을 비판하는 소리였다.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확히 지적한 주장이었다.

이 개혁운동에 입각해 대중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결국 통일사회당은 장차의 정국에서 저항운동 단체들에게 책임을 분담하고 대화를 통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1989년 11월 22일 “중앙원탁회의(Der zentrale Runde Tisch)”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제안은 중앙회의뿐 아니라 각 지역별 원탁회의의 구성도 촉발시켜 11월 29일 라이프치히(Leipzig)를 시발로 하여 곳곳에서 원탁회의(Runder Tisch)의 구성이 활발해졌다. 통일사회당의 제안에 따라 인민의회 의원들과 정당 및 저항운동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12월 7일 첫모임을 가진 중앙원탁회의는 국가의 장래 문제를 토론하고 정부와의 협조 속에 새 선거법 제정과 제도 개혁 등 적절한 개혁 조치와 수단들을 창출·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 원탁회의는 통일사회당이 이미 실질적인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한 1989-90년간 권력의 공백기 - 1989년 12월 3일 통일사회당은 개혁의

의 이견그룹들을 반대운동체라 하고 변동기의 저항운동체들을 저항운동단체라 한다.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당권력의 핵심기구인 중앙위(Zentralkomitee)와 정치국(Politbüro)을 해체했다 - 에 많은 부분 정부와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치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¹³⁾

2. 사회주의 개혁운동의 좌절과 한계

원탁회의의 활동은 동독 저항운동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다. 동독정보기관(Stasi)의 해체에 공헌하고 그 비밀서류의 소각을 방지했으며, 선거법과 제도개선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원탁회의와 그에 참가한 저항운동단체들의 대표적인 공적이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권리의 유지와 확장 및 경제안정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이 단체들의 중요한 과실로 인정된다. 곧, 원탁회의와 그 참여단체들은 장벽 개방에 따른 서독 상품의 무제한 진입과 대동구 수출부진 등에 속수무책이었으며, 민주적 경제결정과 집단소유의 새로운 형태제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¹⁴⁾ 이후 통일운동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철저히 방관자의 입장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루흐트(Rucht)에 따르면 저항운동 단체들은 개혁과 다원주의의 담론을 수용하고 원탁회의를 통해 장차에도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 모드로(Modrow)정부에 대해 사회주의 개혁이라는 기본적 입장의 공유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화해하고, 제도화된 안정세력의 하나가 되어갔다고 한다.¹⁵⁾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실제 1990년 2월까지 원탁회의의 주요그룹들 중 많은 수가 모드로 정부에 영입해 갔다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¹⁶⁾

13) Dieter Rucht, "German Unific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Role of Social Movement: A Missed Opportunity?,"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Discussion-Papers FS III 95-103 (1995), p. 11 참조.

14) 이 점에서 원탁회의에 처음부터 노동조합이 배제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15) Rucht, *op. cit.*, p. 26 참조.

16) Eva Kolinsky, "Concepts of Party Democracy in the East," Stephen Padgett(ed.), *Parties and Party Systems in the New Germany* (Aldershot et al.: Dartmouth, 1993), pp. 243-4.

시민민주적 자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인텔리 중심의 저항운동단체들이 1989/90년 민주적 개혁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폭발적 대중시위를 주도하면서 사회주의 개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화함으로써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개되고 확장된 행위공간에서 안정을 바라는 세력이 분리해 나가고 이후 급속한 통일을 찬성하는 세력들도 다른 정당과 단체로 이탈해 가는 가운데,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남은 세력들을 중심으로 하는 원탁회의는 1990년 3월 12일 16차 모임을 마지막으로 해산하고 말았다. 마지막까지 남은 세력들의 경우도, 민주주의, 자유, 연대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시민민주적 자유권 주장을 기본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토대운동을 위해 노력하거나 그에 뿌리박지 못함으로써, 대중들의 개혁사회주의 요구를 구체화시켜 자신들이 경험한 현실사회주의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질서 체계를 정의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 통일정국으로의 전환: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권력의 공백기가 시작된 후 “우리가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민주화와 개혁의 구호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통일사회당의 개혁정책을 거부하는 세력들 내에서 “독일은 하나의 조국(Deutschland einig Vaterland)”이라는 민족국가적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변동기에 주체로 활동했던 시위대중들이 통일구호가 등장하자 곧 대중의 정서가 통일로 선회한 것은 아니었다. 1889년 12월 11일 당시까지, 사회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과 국가간 연방제를 거친 완만한 통일 정책을 주장하는 사민당 또는 기타 그와 유사한 입장의 다른 신생정당들을 지지하는 시위대중의 비율은 68%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¹⁷⁾

17) Hartmut Zwahr, *Ende einer Selbstzerstörung: Leipzig und die Revolution in der DDR*(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p. 150.

<표 1> 1989년 시위대중들의 정당정치성향(전체 응답자 2000명에 대한 백분율)

정당·정치/사회단체	날 짜		
	89년 11월 말	89년 12월 4일	89년 12월 11일
기독교민주연합(CDU)	10	12	9
독일자민당(LDPD)	23	11	7
독일민족민주당(NDPD)	3	2	1
통일사회당(SED)	31	6	15
독일농민당(DBD)	5	1	0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17	18	14
사회민주당(SDP)	6	37	42
기타정당	5	13	12

LDPD, NPD: 자유민주동맹(BFD)으로 연맹하였다가 이후 자민당(FDP)으로 통합.

SDP: 이후 SPD로 개명(1990년 1월 12-14일 대의원회의).

출처: Zwahr, *op. cit.*, p. 149.

통일 주장이 다수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은 인민의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 1월부터였다. 경제적 대안과 개혁사회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지 못한 채 분열해 가는 저항운동단체들과 달리, 기민연 중심의 선거연립체인 “독일을 위한 연맹(Allianz für Deutschland)”은 화폐·경제·사회 통합(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협정을 통해 동서화폐의 1:1 교환(당시 실제 환율은 약 10:1)의 가능성을 구체화한 콜(Kohl)총리의 통일정책과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장미빛 미래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Wir sind ein Volk)”라는 구호로 세련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호는 통일사회당 정권이 물러난 상태에서 이제는 소득의 발전과 사회안정망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중정서에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¹⁸⁾ 결국 급격한 흡수통일

18) 당시 대중들의 이러한 정서는 함께 등장했던 “독일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간다” 라는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Berndt Musiolek & Carola Wuttke(ed.),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letzten Jahr der DDR (Oktober 1989 bis April 1990)*, mit einer

의 내용을 담은 “하나의 국민”이라는 구호가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인민”의 구호를 대체한 것은 사회주의적 전망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대안과 개혁이 현실로부터 멀어져 가고, 시위대중들의 헤게모니가 정당의 주도권으로 넘어감을 의미했다.¹⁹⁾

선거전 자체도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동맹(90(Bündnis 90), 녹색당-독립여성연합(Grüne-Unabhängige Frauenverband) 및 통일좌파 행동동맹(Aktionsbündnis Vereinigte Linke)으로 분열된 소규모 조직으로서 재정과 경험이 매우 열악했던 저항운동단체들에게는 처음부터 승산없는 싸움이었다. 반면 기민연과 자민당 등 과거 “국민 전선(Nationale Front)”이라는 집권블럭에 속했던 이른바 블록정당(Block Parteien)들과 사민당은 서독으로부터 막대한 재정과 장비 지원 및 전문적 조언을 받고 있었다. 특히 기민연의 경우는 가장 큰 블록정당으로서 통일사회당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에 걸맞게 각 지역과 사회계층에 잘 정비된 지구조직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시설을 이용하는 면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서독 기민연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지지·지원하였다.²⁰⁾ 선거결과는 사회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저항운동단체의 세 정당들이 도합 5.05%를 얻고, 완만한 통일을 주장한 사민당이 21.9%를 얻는 데 그친 반면, 급속한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을 위한 연맹”은 48.0%를 획득함으로써, 흡수통일 주

Einleitung von Ralf Rytlewski (Berlin: BasisDruck Verlagsgesellschaft mbH, 1991), pp. 15-6; 241 참조.

19) Zwahr, *op. cit.*, p. 141.

20) 서독 기민연/기사연의 원내총무로서 콜총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1998년 총리후보로서 가장 가능성 있는 인물로 물망에 올랐던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동독 기민연이 블록정당이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단점만은 아니며, 과거 블록정당으로서 동독사회를 구성해 가는 데 이바지한 사회세력의 하나였다는 점으로 인해 통일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Ute Schmidt, “Transformation einer Volkspartei - Die CDU im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Oskar Niedermayer & Richard Stöss(eds.), *Parteien und Wähler im Umbruch. Parteiensystem und Wä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4), p. 40-1.

장의 승리로 귀결되었다(<표 2> 참조). 결국 1990년 3월의 인민의회 선거는 통일을 기정 사실화한 국민투표이자 급격한 흡수통일을 선택한 통일 방안을 둘러싼 정책투표였다고 할 수 있다.

<표 2>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의회 선거결과투표참여율: 93.4%

선거연립	정당·정치/사회단체	득표율(%)		의원수	
독일을 위한 연맹 (Allianz für Deutschland)	기독민주연합(CDU)	40.8	48.0	163	192
	독일사회연합(DSU)	6.3		25	
	민주적 혁파(DA)	0.9		4	
사회민주당(SPD)		21.9		88	
민주사회당(PDS)		16.4		66	
자유민주/자유 동맹 (BFD/Liberalen)	독일 포룸당(DFP)	5.3		21	
	자유민주당(LDP)				
	자유민주당(FDP)				
동맹 90(Bündnis 90)		2.9		12	
독일민주농민당(DBD)		2.2		9	
녹색당/독립여성연합 (Grünen/UF)	녹색당(Grüne Partei)	2.0		8	
	독립여성연합(UF)				
독일민주여성동맹(DFD)		0.2		1	
기타		1.1		3	
합		100.0		400	

출처: Zwahr, *op. cit.*, pp. 157-8.

그러나 “독일을 위한 연맹”에 대한 동독인민들의 지지가 단순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줄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과 사회안정망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통일이슈를 둔 국민투표라는 선거의 성격을 볼 때, 그 지지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8.0%였다는 점도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전개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통일 독일의 새로운 균열을 형성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V. 독일 통일과 노동조합의 대응

1. 사회주의개혁운동의 정치세력화: “우리가 인민이다”

동독내 인민민주주의의 후퇴를 비판하는 반대운동은 1970년대 말 이후 생겨난 이견그룹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반대운동의 형성은 자유공간으로 남아 있던 교회를 중심으로 인텔리계층에 기반한 소규모 평화 및 인간·시민권 운동의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시민민주적 자유의 획득을 목표로 한 이 운동의 주도자들은 일반 인민과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회의 주변인물들(Randfiguren)들이었다.²¹⁾

동독내 반대운동의 공개적 정치세력화는 1980년대 말 소련과 다른 동구국가들의 개혁 물결 이후였다. 특히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정책이 동독내 반대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사회주의 개혁의 세력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1989년 여름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서독으로 향하는 대홍수로 시작된 여행자유화와 민주적 권리의 요구는 체제개혁의 소리로 승화되면서 대중시위로 발전한 9월을 거쳐 10월에는 정점을 이루었다.

당시 동독 인민들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주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프롤레타리아와 인민의 이름으로 자본가로부터 빼앗은 인민의 권력을 자본주의 잔재의 청산과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시한부 독재를 행사한 후 다시 인민에게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사회당(SED) 정권이 한시적 독재(Diktatur)가 아니라, “당서열명부

21) Jens Reich, “Warum ist die DDR untergegangen? Legenden und sich selbst erfüllende Prophezeiung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1996), p. 6. 이러한 의미에서 독어 및 영어권의 많은 저술들은 1970년말부터 변동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견그룹과 저항운동체들을 시민운동단체라고 칭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의 “시민”이 갖는 개념은 보다 상세한 논의를 요하므로 이 글에서는 1989/90년 변동기 이전의 이견그룹들을 반대운동체라 하고 변동기의 저항운동체들을 저항운동단체라 한다.

(Nomenklatur)”에 입각한 전제(專制 Alleinherrschaft)로 흘러간 사실을 비판하는 소리였다.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확히 지적한 주장이었다.

이 개혁운동에 입각해 대중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결국 통일사회당은 장차의 정국에서 저항운동단체들에게 책임을 분담하고 대화를 통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1989년 11월 22일 “중앙원탁회의(Der zentrale Runde Tisch)”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제안은 중앙회의뿐 아니라 각 지역별 원탁회의의 구성도 촉발시켜 11월 29일 라이프치히(Leipzig)를 시발로 하여 곳곳에서 원탁회의(Runder Tisch)의 구성이 활발해졌다. 통일사회당의 제안에 따라 인민의회 의원들과 정당 및 저항운동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12월 7일 첫모임을 가진 중앙원탁회의는 국가의 장래 문제를 토론하고 정부와의 협조 속에 새 선거법 제정과 제도 개혁 등 적절한 개혁 조치와 수단들을 창출·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 원탁회의는 통일사회당이 이미 실질적인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한 1989-90년간 권력의 공백기—1989년 12월 3일 통일사회당은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당권력의 핵심기구인 중앙위(Zentralkomitee)와 정치국(Politbüro)을 해체했다—에 많은 부분 정부와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치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²²⁾

2. 사회주의 개혁운동의 좌절과 한계

원탁회의의 활동은 동독 저항운동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다. 동독정보기관(Stasi)의 해체에 공헌하고 그 비밀 서류의 소각을 방지했으며, 선거법과 제도 개선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원탁회의와 그에 참가한 저항운동단체들의 대표적인 공적이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권리의 유지와 확장 및 경제안정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통일과정에 대해서

22) Dieter Rucht, “German Unific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Role of Social Movement: A Missed Opportunity?,”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Discussion-Papers FS III 95-103 (1995), p. 11 참조.

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이 단체들의 중요한 과실로 인정된다. 곧, 원탁회의와 그 참여단체들은 장벽 개방에 따른 서독 상품의 무제한 진입과 대동구 수출부진 등에 속수무책이었으며, 민주적 경제결정과 집단소유의 새로운 형태제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²³⁾ 이후 통일운동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철저히 방관자의 입장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루흐트(Rucht)에 따르면 저항운동단체들은 개혁과 다원주의의 담론을 수용하고 원탁회의를 통해 장치에도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 모드로(Modrow)정부에 대해 사회주의 개혁이라는 기본적 입장의 공유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화해하고, 제도화된 안정세력의 하나가 되어갔다고 한다.²⁴⁾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실제 1990년 2월까지 원탁회의의 주요그룹들 중 많은 수가 모드로 정부에 영입해 갔다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²⁵⁾

시민민주적 자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인텔리 중심의 저항운동단체들이 1989/90년 민주적 개혁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폭발적 대중시위를 주도하면서 사회주의 개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화함으로써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개되고 확장된 행위공간에서 안정을 바라는 세력이 분리해 나가고 이후 급속한 통일을 찬성하는 세력들도 다른 정당과 단체로 이탈해 가는 가운데,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남은 세력들을 중심으로 하는 원탁회의는 1990년 3월 12일 16차 모임을 마지막으로 해산하고 말았다. 마지막까지 남은 세력들의 경우도, 민주주의, 자유, 연대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시민민주적 자유권 주장을 기본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토대운동을 위해 노력하거나 그에 뿌리박지 못함으로써, 대중들의 개혁사회주의 요구를 구체화시켜 자신들이 경험한 현실사회주의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질서체계를 정의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3) 이 점에서 원탁회의에 처음부터 노동조합이 배제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24) Rucht, *op. cit.*, p. 26 참조.

25) Eva Kolinsky, "Concepts of Party Democracy in the East," Stephen Padgett(ed.), *Parties and Party Systems in the New Germany* (Aldershot et al.: Dartmouth, 1993), pp. 243-4.

3. 통일정국으로의 전환: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권력의 공백기가 시작된 후 “우리가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민주화와 개혁의 구호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통일사회당의 개혁정책을 거부하는 세력들 내에서 “독일은 하나의 조국(Deutschland einig Vaterland)”이라는 민족국가적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변동기에 주체로 활동했던 시위대중들이 통일구호가 등장하자 곧 대중의 정서가 통일로 선회한 것은 아니었다. 1889년 12월 11일 당시까지, 사회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과 국가간 연방제를 거친 완만한 통일 정책을 주장하는 사민당 또는 기타 그와 유사한 입장의 다른 신생정당들을 지지하는 시위대중의 비율은 68%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²⁶⁾

<표 1> 1989년 시위대중들의 정당정치성향전체 응답자 2000명에 대한 백분율

정당·정치/사회단체	날 짜		
	89년 11월 말	89년 12월 4일	89년 12월 11일
기독민주연합(CDU)	10	12	9
독일자민당(LDPD)	23	11	7
독일민족민주당(NDPD)	3	2	1
통일사회당(SED)	31	6	15
독일농민당(DBD)	5	1	0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17	18	14
사회민주당(SDP)	6	37	42
기타정당	5	13	12

LDPD, NDPD: 자유민주동맹(BFD)으로 연맹하였다가 이후 자민당(FDP)으로 통합.

SDP: 이후 SPD로 개명(1990년 1월 12-14일 대의원회의).

출처: Zwahr, op. cit., p. 149.

26) Hartmut Zwahr, *Ende einer Selbstzerstörung: Leipzig und die Revolution in der DDR*(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p. 150.

통일 주장이 다수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은 인민의회 선거 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 1월부터였다. 경제적 대안과 개혁사회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지 못한 채 분열해 가는 저항운동단체들과 달리, 기민연 중심의 선거연립체인 “독일을 위한 연맹(Allianz für Deutschland)”은 화폐·경제·사회 통합(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협정을 통해 동서화폐의 1:1 교환(당시 실제 환율은 약 10:1)의 가능성을 구체화한 콜(Kohl)총리의 통일정책과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장미빛 미래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Wir sind ein Volk)”라는 구호로 세련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호는 통일사회당 정권이 물러난 상태에서 이제는 소득의 발전과 사회안정망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중정서에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²⁷⁾ 결국 급격한 흡수통일의 내용을 담은 “하나의 국민”이라는 구호가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인민”의 구호를 대체한 것은 사회주의적 전망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대안과 개혁이 현실로부터 멀어져 가고, 시위대중들의 헤게모니가 정당의 주도권으로 넘어감을 의미했다.²⁸⁾

선거전 자체도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동맹90(Bündnis 90), 녹색당-독립여성연합(Grüne-Unabhängige Frauenverband) 및 통일좌파 행동동맹(Aktionsbündnis Vereinigte Linke)으로 분열된 소규모 조직으로서 재정과 경험이 매우 열악했던 저항운동단체들에게는 처음부터 승산없는 싸움이었다. 반면 기민연과 자민당 등 과거 “국민 전선(Nationale Front)”이라는 집권블럭에 속했던 이른바 블록정당(Block Parteien)들과 사민당은 서독으로부터 막대한 재정과 장비 지원 및 전문적 조언을 받고 있었다. 특히 기민연의 경우는 가장 큰 블록정당으로서 통일사회당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걸맞게 각 지역과 사회계

27) 당시 대중들의 이러한 정서는 함께 등장했던 “독일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간다” 라는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Berndt Musiolek & Carola Wuttke(ed.),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letzten Jahr der DDR (Oktober 1989 bis April 1990)*, mit einer Einleitung von Ralf Rytlewski (Berlin: BasisDruck Verlagsgesellschaft mbH, 1991), pp. 15-6; 241 참조.

28) Zwahr, *op. cit.*, p. 141.

층에 잘 정비된 지구조직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시설을 이용하는 면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서독 기민연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지지·지원하였다.²⁹⁾ 선거결과는 사회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저항운동단체의 세 정당들이 도합 5.05%를 얻고, 완만한 통일을 주장한 사민당이 21.9%를 얻는 데 그친 반면, 급속한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을 위한 연맹”은 48.0%를 획득함으로써, 흡수통일 주장의 승리로 귀결되었다(<표 2> 참조). 결국 1990년 3월의 인민의회 선거는 통일을 기정 사실화한 국민투표이자 급격한 흡수통일을 선택한 통일 방안을 둘러싼 정책투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을 위한 연맹”에 대한 동독인민들의 지지가 단순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줄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과 사회안전망이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통일이슈를 둔 국민투표라는 선거의 성격을 볼 때, 그 지지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8.0%였다는 점도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전개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통일 독일의 새로운 균열을 형성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9) 서독 기민연/기사연의 원내총무로서 콜총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1998년 총리후보로서 가장 가능성 있는 인물로 물망에 올랐던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동독 기민연이 블록정당이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단점만은 아니며, 과거 블록정당으로서 동독사회를 구성해 가는 데 이바지한 사회세력의 하나였다는 점으로 인해 통일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Ute Schmidt, “Transformation einer Volkspartei - Die CDU im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Oskar Niedermayer & Richard Stöss(eds.), *Parteien und Wähler im Umbruch. Parteiensystem und Wä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4), p. 40-1.

<표 2>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의회 선거결과투표참여율: 93.4%

선거연립	정당·정치/사회단체	득표율(%)		의원수	
독일을 위한 연맹 (Allianz für Deutschland)	기독교민주연합(CDU)	40.8	48.0	163	192
	독일사회연합(DSU)	6.3		25	
	민주적 혁파(DA)	0.9		4	
사회민주당(SPD)		21.9		88	
민주사회당(PDS)		16.4		66	
자유민주/자유 동맹 (BFD/Liberalen)	독일 포룸당(DFP)	5.3		21	
	자유민주당(LDP)				
	자유민주당(FDP)				
동맹 90(Bündnis 90)		2.9		12	
독일민주농민당(DBD)		2.2		9	
녹색당/독립여성연합 (Grünen/UF)	녹색당(Grüne Partei)	2.0		8	
	독립여성연합(UF)				
독일민주여성동맹(DFD)		0.2		1	
기타		1.1		3	
합		100.0		400	

출처: Zwahr, *op. cit.*, pp. 157-8.

IV. 독일 통일과 노동조합의 대응

1. 동독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대응

동독의 변혁과 변동은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노동자들 내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노조가 노동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중앙집중구조에서 ‘전달띠(Transmissionsriemen)’ 역할에 얽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움직임이 있었다면, “독립노조 이니셔티브(Initiative für unabhängige Gewerkschaften: IUG)”가 유일한 것이었다. 비록 그 파장은 크지 않았지만, IUG는 노동자들에 의한 유일한 사회주의 개혁그룹으로서 독립적인 노조를 조직하여 노동자 대

변구조를 급진적으로 개혁코자 한 그룹이었다

한편 국가와 사회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노조내의 개혁을 주장한 그룹으로 인민공사(VEB)의 ‘개혁(Reform)그룹’과 노조학교(Gewerkschaftsschule) 학생그룹이 있었다.

1) 독립노조 이니셔티브(IUG: Initiative für unabhängige Gewerkschaften)³⁰⁾

IUG는 당시 인텔리 및 중간계층 중심의 현실사회주의 개혁운동에 반대하고 공장내 토대운동을 중시한 유일한 노동자 개혁운동이었다. IUG는 자본주의와 관료독재를 극복한 새로운 대안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위로부터의 개혁을 반대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공장내에서 통일사회당을 축출하는 운동과 통일사회당의 전달체인 FDGB를 대신하는 강력한 독립노조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

1989년 11월 15일 ‘연락사무소(Kontaktbüro)’를 연 것이 IUG 조직활동의 시작이다. 이후 IUG는 1990년 11월 조합비 납부 거부운동을 실현시켰고, 12월 20일에는 새 노조의 건설을 공식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월초에 170개 기업에서 2만 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IUG에 가입하고, 베를린을 중심으로 7개의 공장에서 ‘독립 토대그룹(Unabhängige Basisgruppe)’이 결성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IUG의 활동이 대중운동으로 승화되지는 못하여 1990년 2월 3일 대회는 애초의 계획과 달리 ‘독립노조’ 결성대회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당시 대중시위를 주도하던 인텔리중심의 저항운동단체들이 ‘단일통합노

30) 동독 변동기의 대안적 노동운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는 Leonore Ansorg & Renate Hürtgen, “Aber jetzt gibt es Initiative Leute und die mußte man eigentlich alle an einen Tisch bringen: Die ‘Initiative für unabhängige Gewerkschaften’ (IUG) 1989 bis 1990, Darstellung und Dokumente,” Berliner Arbeitshefte und Berichte zur Sozialwissenschaftlichen Forschung, Vol. 73 (Freie Universität Berlin: Zentral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1992)와 Pirker et al., *op. cit.*, pp. 43-4 참조.

조(Einheitsgewerkschaft)’를 절대시하는 입장에서 ‘독립노조 이니셔티브(IUG)’운동을 반대했음에 일차적으로 영향받은 결과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IUG에 대한 FDGB의 통합 시도가 가시화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IUG 내에서도 독립노조의 건설보다 직업적 이해대변을 우선시하는 그룹들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결국 통일로 가는 급행열차의 기적 속에 이들의 소리도 묻혀버리고 만 것이다.

이후 IUG는 1990년 11월 4일 알렉산더 광장 시위 1주년 기념일을 기해, ‘비판적 노조활동 그룹(Kritische Gewerkschaftsarbeit: KG)’으로 개명하여 현재 서독의 비판적 노조원그룹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2) 개혁(Reform) 그룹³¹⁾

‘개혁 그룹’은 1989년 12월 10일 인민공사(VEB) 종업원들에 의해 조직된 독립기업노조를 말한다. 이 그룹은 기업노조의 독자성, 관료적 통제 의 폐지, 기업내 노조의 공동결정권, 여행제한의 폐지 및 경제적 결핍의 극복을 주장하였다.

‘개혁 그룹’의 구체적 활동은 FDGB 기관지인 ‘트리뷴(Tribüne)’에 비판적 글을 게재하거나 노련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었다. 그룹 활동가들은 노련 지도부와 기업노조지도부에 대한 신임문제를 제기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IUG와 달리 노련내 개혁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

3) 노조학교(Gewerkschaftsschule) 학생그룹³²⁾

노조학교 학생그룹도 ‘개혁 그룹’과 마찬가지로 노련의 개혁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989년 12월 6일 노련중앙지도부에 반대해 수백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당시 이 그룹의 주장은 노련 중앙지도부

31) *Ibid* 참조

32) *Ibid* 참조

의 전원 사퇴, 임시지도부의 재구성, 토대조합원 입지의 강화, 노조 간부의 부정부패 색출, 단일 통합노조 유지, 노조의 ‘원탁회의’ 참여였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변혁의 기운이 무르익었던 당시에는 베를린의 기업노조지도부와 지역노조지도부 모임도 이 주장에 찬성하여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도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처럼 변혁과 통일의 기운이 더욱 거세어지자 통일운동에 흡수되어가면서 일회적 흐름으로 막을 내렸다.

4) 동독자유노련(FDGB)의 대응³³⁾

상술한 바와 같이 1989년 3월부터 인민공사의 비판적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비판과 이탈이 생겨나고 있었음에도 FDGB는 이를 경시했다. 그렇지만 비판적 활동이 동독노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만은 않아 1989년 9월말에 FDGB 위원장 티쉬(Harry Tisch)는 중앙지도위에서 당에 대한 노조의 독자역할을 주장하고 경제계획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후 노조 내 개혁의 물꼬가 트이면서 1989년 10월초 FDGB는 정치국 노선과의 단절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독노조의 이러한 대응도 같은 달 18일 호네커 서기장이 퇴진하는 등 통일사회당의 몰락이 기정사실화된 후에 나타난 것에 불과했으며 변혁과 통일의 정국에 대한 노동자 조직의 주체적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티쉬 위원장 또한 10월 28일 인민공사노조 위원장의 신임문제 제기로 사퇴해야만 했으며, 당시 금속노조위원장과 함께 공금횡령죄로 구속되는 등 기존 정권의 특권과 밀착된 노조지도부의 문제도 심각하게 남아 있었다. 결국 킴멜(Annelis Kimmel) 신임 FDGB위원장은 노조재정 공개와 산별노조 강화를 강조하며 당직을 겸임한 노조지도자들의 당직 사임을 권고했으며, 실제 사임하지 않은 많은 지도자들이 노조직을 사퇴해야만

33) *Ibid.*; Joachim Genosko, “Die Gewerkschaften im Übergang vom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Eine Gewerkschaftstheoretische Analyse,” Gerhard Kleinhenz(ed.), *Sozialpolitik in vereinten Deutschland I* (Berlin: Duncker & Humblot, 1991) 참조.

했다. 그러나 김멜 위원장 또한 1989년 12월 9일 노조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사퇴했는데,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FDGB 지도부가 지금까지 당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특권과 관직을 남용하고 부정으로 얼룩졌음을 시인했다.

김멜 위원장의 사퇴는 동독노조의 변화에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1990년 1월31일-2월1일에 임시 전국대회 때까지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고 33인의 '임시대회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임시대회 준비위원회'의 주요 목표와 활동 구상은 다음과 같다.

주요 목표

- 1) 강력하고 독립적인 단위노조 건설,
- 2) 상급조직인 노련은 중앙, 구역, 지역 차원에서 기능하는 작은 기구로서 노련과 단위노조의 협력을 원활히 하도록 개혁
- 3) 노동조합법상 노동투쟁권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권리 보호

활동 구상

- 1) 준비위 강령작업에 주요 활동그룹과 비판 그룹들을 통합,
- 2) 퇴직 간부의 사회적 보장을 보증하는 선에서 노련을 위와 같은 상급조직으로 구성,
- 3) 스캔들의 도덕적 극복과 개인적 처벌을 통해 노조 기구의 명예를 세우고 부담을 덜어줌,
- 4) 사업장과 사회에서 기존 노조활동을 법적으로 보장 직장평의회가 도입되면 경쟁조직으로서 정치투쟁을 할 수 있도록 수용

그러나 이러한 목표와 활동구상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독일 통일은 기정사실화되었고 동독 노조도 서독 노조로 흡수 통합되기로 결정되었다. 변혁기 정국에서 뒤늦게 출발한 노동자와 노조의 대응들이 급속한 통일의 바람에 휩쓸려 간 것이다.

2. 독일 통일과 서독 노조의 대응

서독 노조도 통일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관심했다 경제 사회 통합 등 통일 정책에 서독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노동계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직접 적용되었고 독일노련(DGB)은 이를 수용했다. 산별노조들도 동독의 노조는 동독 통일사회당의 대중조직으로서 독립적인 노동자 이해대변조직이 아니라는 입장에 의견을 같이하여 동독 노조들이 서독 노조의 체계로 통합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반면³⁴⁾ 동독 노조 내 비판 그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동서독 노조간 대화는 1989년 9월 11일 당시 FDGB위원장 티쉬가 DGB의 초청으로 서독을 방문한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다 DGB는 티쉬 위원장이 사퇴, 구속된 후 비개입 원칙으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1990년 1월31일-2월1일 FDGB 임시전국대회 이후 다시 개입정책으로 전환하여 노조통합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DGB와 서독 산별노조의 동독 노조에 대한 1단계 정책은 ‘동독노조간부들의 교육(능력향상)’이었으며, 대표적인 선두주자는 금속노조와 화학·제지·케라믹 노조였다. 1989년 12월 서독 금속노조와 동독 금속노조는 기업간 파트너관계와 서독 금속노조의 시설 이용 및 전문가 교환을 통한 동독 노조간부의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프로그램(Sofortprogramm)’에 합의했으며, 같은 때 서독 화학·제지·케라믹 노조도 동독 화학·유리·케라믹 노조는 한 발 앞서 통합의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이후 동서독 노조간 통합은 단위노조별로 통합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흡수 방식의 국가통합처럼 동독노조가 해체된 후 동독지역 노동자들이 서독노조로 개별 가입하는 흡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4) Klaus Armingeon, “Gewerkschaftliche Politik im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Ulrike Liebert & Wolfgang Merkel (eds.),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Probleme -Strategien -Kontroversen* (Opladen: Leske + Budrich, 1991), p. 285.

3.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통합의 지연과 노동조합 정책의 소극성

통합이후 DGB는 동독지역 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노련 내에서는 ‘신속한 임금동일화안’과 ‘경제적 가능성과 효율성’의 관점에 선 ‘단계적 임금동일화안’의 논쟁이 일어났다. 그에 따라 실제 1991년 상반기에 노조의 찬성으로 체결된 각종 단체협약은 ‘단계적 임금동일화안’에 합의하였지만, 그 시기는 대개 1994년말까지로 한정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³⁵⁾

그러나 이후 체결된 단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임금 동일화 속도는 동독지역 노동자들에게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과 물가수준의 급속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독 노동자들의 단협 임금 수준은 대개의 경우 1996년 말경에 와서야 서독 수준과 평등하게 되었다. 특히 건설 부문과 은행업에서는 1997년 4월 이후에야 평등화되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늦어 아직도 서독 수준의 85%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 그것은 통일독일의 동독지역 발전정책이 일정기간 노동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투자를 촉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한다.

실질 임금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1999년 서독 대비 동독의 실질 임금수준 비율은 수공업 부문에서 최저치인 68.3%였고, 최고치를 보인 소상공 부문에서조차 81.0%에 불과했다(광공업 생산직 71.8%, 광공업 사무직 74.4%, 대상업 72.0%, 신용 보험 75.8%, <표 3> 참조). 시민당이 재집권한 연도인 2002년에도 전체적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공업 부문은 여전히 열악하여 67.9%에 머물렀으며, 최고치인 소상공 부문은 79.4%에 머물러 오히려 1999년보다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마저 보였다(광공업 생산직 70.3%, 광공업 사무직 74.2%, 대상업 68.1%, 신용 보험 74.2%).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단

35) 남구현·황기돈,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사회변화와 노동조합』 (서울: 현장에서 미래를, 2000), pp. 48-9.

36)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는 1997년 9월 1일자부터 현재 84%에서 85%로 올릴 것을 단협으로 결정하였다 “WSI-Tarifinformationen,” [http:// www.w.hessen.dgb.de/dgbbvv/wsi-ta/ford-abs.htm](http://www.w.hessen.dgb.de/dgbbvv/wsi-ta/ford-abs.htm)(검색일: 2000년 5월 7일) 참조.

협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나(동독 기업들이 사용자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계속 생겨남), 동독 출신자들이 동종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노조는 이러한 동서독인들간 직업과 업무구조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 특히 사민당 집권 이후에는 일정한 양보 교섭의 행태도 한 몫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3> 동서독 실질임금수준 비교(DM: 월평균 임금)

업종		1997		1999		2002**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광공 업	생산직*	26.74	19.32	27.99	20.09	15.17	10.66
	사무직	6,455	4,770	6,772	5,040	3,716	2,759
수공업*		23.63	16.28	24.26	16.57	12.96	8.80
대사업		4,854	3,491	5,110	3,681	3,019	2,055
소사업		3,900	3,089	4,019	3,254	2,285	1,815
신용 보험		4,775	3,581	5,044	3,825	2,876	2,135

* 시간당 임금

** EURO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http://www.destatis.de>)

실업문제도 독일은 과연 통일되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통일 독일에서의 동·서독간 사회경제적 차이는 이탈리아 남북부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표 4>에 보이듯이 통일 직후인 1991년 10.3%였던 구동독의 실업률은 1998년 19.5%로 거의 배가되었다. 서독 지역의 실업률 또한 일정하게 상승하였음에도 1998년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서독 지역에 비해 근 두 배에 가까웠으며(1.86배), 1999년 12월에는 2.36배에 이르렀다(전체 11.5%, 동독지역 19.1%, 서독지역 8.1%)³⁷⁾

37) Statistisches Bundesamt, <http://www.statistik-bund.de/indicators/d/arb210ad.htm>; [arb220ad.htm](http://www.statistik-bund.de/indicators/d/arb220ad.htm); [arb230ad.htm](http://www.statistik-bund.de/indicators/d/arb230ad.htm)(검색일: 2000년 10월 8일). 이 차이는 사민당이 집권한 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 12월 31일에 2.20배를 기록했다(전체 10.1%, 구동독지역 17.9%, 구서독지역 8.1%). Statistisches Bundesamt, <http://www.destatis.de/indicators/d/arb210ad.htm>; [arb220ad.htm](http://www.destatis.de/indicators/d/arb220ad.htm); [arb230ad.htm](http://www.destatis.de/indicators/d/arb230ad.htm)

<표 4> 동서독 실업률 비교 (연평균, %)

	1991	1993	1996	1998	2002*
구동독지역	10.3	15.8	16.7	19.5	17.9
구서독지역	6.3	8.2	10.1	10.5	8.1
전국	7.3	10.5	11.5	12.3	10.1

* 2002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http://www.statistik-bund.de>)

통일후 사회경제 통합의 지연은 물론 국가 정책과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대단히 소극적이었다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상이한 체제를 통합시키는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노동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통합 독일노조는 여러 부문에 걸쳐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만 했다. 예를 들어 동독지역 산업 해체에 대한 대안적 구조조정정책과 지역발전정책,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안정정책, 실질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적절한 소득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등이 필요했으며, 동독주민들은 통합노조에게 이러한 정책들의 적극적인 요구 혹은 추진을 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분야에서의 활동과 성과는 임금정책에서보다 훨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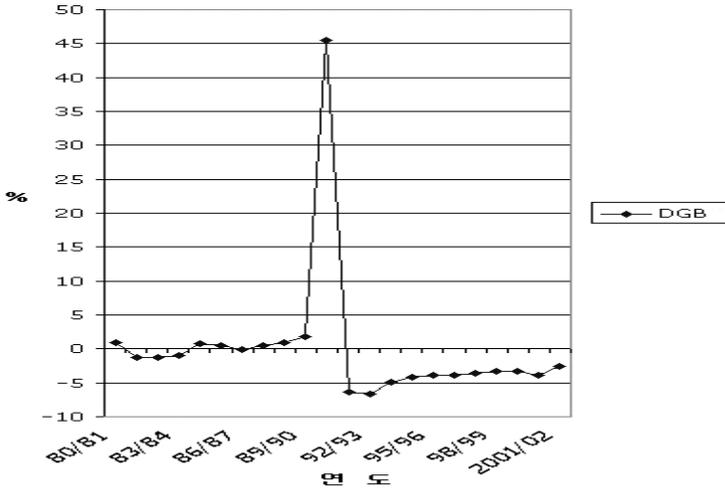
통합 노조의 이러한 활동상의 소극성은 노조의 조직률 추이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 통일 이후 4백여만 명의 새로운 조직원을 맞은 DGB는 1994년까지 불과 3년 사이에 약 2백만 명의 조합원을 상실하여 최대의 조합원 감소를 겪었는데(<그림 1> 참조), 이중 약 1백 70만 명(동독 지역 기존 조합원의 약 40%)이 동독지역 조합원들이었다(<표 5> 참조). 그 결과 DGB의 조직률은 3년만에 통일이전 수준으로 후퇴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독지역의 경우는 통일 직후 60.2%까지 올라갔던 조직률이 1994년 12월 31일 현재 43.1%로 17%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러한 독일노조의 조직률 감소는 동독지역의 급격한 경제변화에도 기인하지만 임금

ad.htm(검색일: 2003년 8월 25일).

38) 남구현·황기돈, 위의 책, pp. 52-3.

과 실업문제 등 통합 독일노조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동독노동자들의 기대가 상실되었음에 기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림 1> 독일노련(DGB) 조합원 증감추이(% , 1980-2002)



출처: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On-line

<표 5> 독일노련(DGB) 조직율과 감소 추이

(%, 1992-1997년간 괄호 안*은 전년도 조합원 대비 감소 비율)

연도	구서독	구동독	통일독일
1988	32.1	-	-
1991	29.3	60.2	35.7
1992	28.9(-0.2)	56.5(-18.4)	34.0(-6.7)
1993	28.5(-3.2)	50.1(-14.3)	32.4(-6.6)
1994	28.6(-2.8)	43.1(-10.9)	31.2(-5.1)
1997*	26.5(-2.4)	28.8(-7.8)	27.0(-3.9)
2000**	-	-	22.0

출처: 1988-1994: Michael Kittner(ed.), *Gewerkschaftsjahrbuch 1989-1995* (Köln: Bund-Verlag, 1995);

*1997년도와 감소비율: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On-line*.

**2000: Hans Böckler Stiftung, *Datenkarte 2002*.

V. 요약과 결론

동독 사회에서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기인하기도 하나 더 본질적으로는 노동사회적 통합으로 인해 저항세력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보상과 평등 이념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동의라는 노동사회의 기초가 무너져 감으로써 동독 사회에서도 저항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동구권 변동이라는 외적 조건의 영향에 힘입어 이 저항운동은 정치 세력화했다.

그러나 급작스런 통일의 진행과는 달리 이 저항운동단체들의 대부분은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내 개혁과 민주화를 목적으로 성립된 조직들이었다. 이와 같이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했던 저항운동단체들은 동구권 변동기에서 대중시위를 주도하며 통일사회당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운동체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적 자유권의 획득을 주요 목표로 하는 인텔리 중심의 저항운동단체로서 동독의 노동자대중에 뿌리박지 못했다. 따라서 시위대중들의 사회주의 개혁 요구를 담아내는 대안 창출과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전망 제시에 실패함으로써, 선거와 통일을 앞두고 자체 세력마저 분열해 가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동독 노조들은 노동자대변의 일원적 조직이었지만 역시 노동사회적 통합과 전달띠로서의 한계로 인해 통일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물론 당시 저항운동체들이 노동자조직의 인텔리 중심적 성격으로 노동자조직과 쉽게 결합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IUG가 정치사회적 운동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대부분 노조의 민주화 개혁 이슈에 한정되었으며, FDGB도 조직내 개혁 압력에 떠밀려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머물렀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서독 노조들도 마찬가지였다. 서독 노조들은 통일 자체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며, 급박한 통일의 과정 속에서는 동독 노조의 흡수정책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반면 서독 정당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동독의 정당들 특히 기민연을 중심으로 한 과거 블럭정당들은 통일사회당이 붕괴한 후 사회안전망과 경

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을 원하는 대중의 정서를 통일이슈로 묶어내어 권력의 공백기를 선거전으로 몰아가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는 기민당 당수인 콜(Helmut Kohl)과 식민지화(colonization)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흡수통일을 회화적으로 비판한 ‘콜-로니제이션(Kohlolonization)’이라는 신조어에서도 드러나듯이 흡수통일의 정치적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일과정과 동독 정치·사회단체들의 무력함은 또한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통합에 있어서도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통일노조는 제반 사회정책과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임금정책에서도 흡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조직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해왔다.

이와 같이 동독의 정치·사회단체들은 동독내의 개혁에 실패하고 통일과정과 통일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동독주민들의 독자적 정치역량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는 통일독일의 통합정책이 조속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시될 때에는 통일후유증을 단기간에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동·서독과 같은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 과정이나 통일후의 정책들은 매우 통합적이었고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이라고 하나 서독은 엄청난 통일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면서 동독을 받아들여 비록 지연되기는 했지만 지역차이의 해소에도 진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사뭇 달라진다. 흡수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서독과 기민연 중심의 통일과정은 통합정책이 지연되거나 배제적 정책이 실시될 때 새로운 지역적 균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들 내에 ‘2등 국민’ 감정이 생겨난 사실과, 민사당(PDS)이 지역주의적 주장을 펴면서 동독지역 주민들의 표를 획득해 온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형평을 중시하는 적녹연정의 집권 후에도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볼 때, 지역 격차의 해소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후의 사회경제적 통합정책’이 지역간 형평을 이루지 못한 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독지역 주민들의 박탈감도 더욱 굳어져 사회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갈 것이다.

참고 문헌

- 남구현·황기돈, 『독일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사회변화와 노동조합』, 서울: 현장에 서 미래를, 2000.
- 정병기,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이론』, 통권 17호, (1997).
- 푸쉬라, 베르너, “노동조합과 독일통일,” 『노동문제논집』, 제9권, (1991).
- Ansorg, Leonore & Renate Hürtgen, “Aber jetzt gibt es Initiative Leute und die mußte man eigentlich alle an einen Tisch bringen: Die ‘Initiative für unabhängige Gewerkschaften’ (IUG) 1989 bis 1990, Darstellung und Dokumente,” Berliner Arbeitshefte und Berichte zur Sozialwissenschaftlichen Forschung, Vol. 73, (Freie Universität Berlin: Zentral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1992.
- Armingeon, Klaus, “Gewerkschaftliche Politik im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Ulrike Liebert & Wolfgang Merkel(eds.),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Probleme-Strategien-Kontroversen*, (Opladen: Leske + Budrich), 1991.
-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On-line*, <http://www.eiro.eurofound.eu.int/1998/03/Feature/DE9803153F.html>(검색일: 2003년 8월 25일).
-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On-line*, <http://www.eiro.eurofound.eu.int/2003/02/InBrief/DE0302201N.html>(검색일: 2003년 8월 25일).
- Feist, Ursula, “Zur politischen Akkulturation der vereinten Deutschen. Eine Analyse aus Anlaß der ersten gesamtdeutschen Bundestagswahl,”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1-12 (1991).
- Genosko, Joachim, “Die Gewerkschaften im Übergang vom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Eine Gewerkschaftstheoretische Analyse,” Gerhard Kleinhenz(ed.), *Sozialpolitik im vereinten Deutschland I*, (Berlin: Duncker & Humblot), 1991.
- Gill, Ulrich, *Der 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 (FDGB): Theorie -*

- Geschichte - Organisation - Funktion - Kritik*,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9.
- Gohl, Dietma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ine aktuelle Landeskunde*, (Frankfurt/M: Fischer), 1986.
- Greiffenhagen, Martin & Sylvia, "Die ehemalige DDR als das 'deutschere' Deutschland?,"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ed.), *Die neuen Bundesländer*, (Stuttgart et al.: W. Kohlhammer), 1994.
- Hans Böckler Stiftung, *Datenkarte 2002*, http://www.boeckler.de/pdf/pub_datenkarte_2002_land_und_eu.pdf(검색일: 2003년 8월 25일).
- Kittner, Michael(ed.), *Gewerkschaftsjahrbuch 1989-1995*, (Köln: Bund-Verlag), 1995.
- Kolinsky, Eva, "Concepts of Party Democracy in the East," Stephen Padgett(ed.), *Parties and Party Systems in the New Germany*, (Aldershot, et al.: Dartmouth), 1993.
- Mayer, Karl Ulrich & Martin Diewald, "Kollektiv und Eigensinn: Die Geschichte der DDR und die Lebensverläufe ihrer Bürg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1996).
- Musiolek, Berndt & Carola Wuttke(ed.),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letzten Jahr der DDR (Oktober 1989 bis April 1990)*, mit einer Einleitung von Ralf Rytlewski, (Berlin: BasisDruck Verlagsgesellschaft mbH), 1991.
- Pirker. Theo, Hans-Hermann Hertle, Jürgen Kädtler and Rainer Weinert, *FDGB - Wende zum Ende: Auf dem Weg zu unabhängigen Gewerkschaften?*, (Köln: Bund-Verlag), 1990.
- Reich, Jens, "Warum ist die DDR untergegangen? Legenden und sich selbst erfüllende Prophezeiung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1996).
- Rucht, Dieter, "German Unific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Role of Social Movement: A Missed Opportunity?,"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Discussion-Papers FS III 95-103 (1995).
- Schmidt, Ute, "Transformation einer Volkspartei - Die CDU im Prozeß

- der deutschen Vereinigung,” Oskar Niedermayer & Richard Stöss(eds.), *Parteien und Wähler im Umbruch Parteiensystem und Wä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4.
- Solga, Heike, “Klassenlagen und soziale Ungleichheit in der DD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1996).
- Sørensen, Aage, “Clouding Essay: Class, Status and Power,” David B. Grusky(ed.),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 (Boulder, et al.: Westview Press), 1994.
- Statistisches Bundesamt(<http://www.statistik-bund.de>), <http://www.statistik-bund.de/indicators/d/arb210ad.htm>; [arb220ad.htm](http://www.statistik-bund.de/indicators/d/arb220ad.htm); [arb 230ad.htm](http://www.statistik-bund.de/indicators/d/arb230ad.htm) (검색일: 2000년 10월 8일).
- Statistisches Bundesamt(<http://www.statistik-bund.de>), <http://www.statistik-bund.de/indicators/d/arb210ad.htm>; [arb220ad.htm](http://www.statistik-bund.de/indicators/d/arb220ad.htm); [arb230 ad.htm](http://www.statistik-bund.de/indicators/d/arb230ad.htm)(검색일: 2003년 8월 25일).
- Statistisches Bundesamt(<http://www.destatis.de>), [http://www.destatis.de/basis/d/logh/ loghtab1.htm](http://www.destatis.de/basis/d/logh/loghtab1.htm); [loghtab2.htm](http://www.destatis.de/basis/d/logh/loghtab2.htm); [loghtab3.htm](http://www.destatis.de/basis/d/logh/loghtab3.htm); [loghtab4.htm](http://www.destatis.de/basis/d/logh/loghtab4.htm); [loghtab5.htm](http://www.destatis.de/basis/d/logh/loghtab5.htm); [loghtab6.htm](http://www.destatis.de/basis/d/logh/loghtab6.htm); [loghtab15.htm](http://www.destatis.de/basis/d/logh/loghtab15.htm); [loghtab15.htm](http://www.destatis.de/basis/d/logh/loghtab15.htm)(검색일: 2003년 8월 25일).
- “WSI-Tarifinformationen,”[http://www.hessen.dgb.de/dgbbvv/ wsi-ta/ford-abs.htm](http://www.hessen.dgb.de/dgbbvv/wsi-ta/ford-abs.htm) (검색일: 2000년 5월 7일).
- Zwahr, Hartmut, *Ende einer Selbsterstörung: Leipzig und die Revolution in der DD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